

# 現代經濟理論의 開發途上國適用的 問題

—韓國實情을 中心으로—

金 德 中\*

<目 次>	
<b>I. 序 言</b> <b>II. 現代經濟理論과 開發途上國</b> 1. 現實性的 問題 2. 適合性的 問題 3. 副作用의 問題	<b>III. 經濟開發計劃과 韓國經濟</b> 1. 經濟理論의 韓國經濟에 대한 適用 2. 適用上에 나타난 問題點과 評價 <b>IV. 結 言</b>

## I. 序 言

1950年代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흔히「理論과 現實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만큼 韓國社會에서 理論의 現實適用可能性은 等閑視되거나 아니면 意圖的으로 拒否되었던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本格的인 經濟開發計劃이 樹立된 이래 비록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經濟學者들이 直接 혹은 間接的으로 現實에 參與하는 機會가 漸增되어 왔던 것이 그 間의 實情이라 하겠다. 물론 우리가 論議하고 있는 主題가 現代經濟理論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適用에 관한 것이고 또한 參與 自體가 經濟理論이 參與한 것이 아니라「經濟學者」가 參與한 것이라는 批判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學問的 背景이 經濟學일진대 우리는 이것을 經濟理論의 現實參與라고 말해도 無妨할 것이다. 특히 近年間에 있었던 1, 2, 3次 5個年計劃의 巨視經濟模型作成에 있어서 少數의 外國專門家들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國內經濟學者나 經濟官僚의 役割은 결코 過少評價될 수 없으며, 더욱기 1977년부터 시작될 4次 5個年計劃의 樹立에는 보다 많은 經濟學者들의 參與가 있을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우리의 現實이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大部分의 開發途上國들에 있어 傳統的인 “西歐”의 經濟理論이 果然 自國經濟에도 適用될 수 있는냐는 問題가 深刻하게 擡頭되어 왔으며 특히 最近 石油波動以後 經濟理論의 現實問題의 解決能力에 관해 經濟理論의 本山

\* 西江大學校經商大學 教授

인 先進諸國에서까지도 論難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

뿐만 아니라 經濟理論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適用問題를 일단 떠나서라도 現實問題解決에 있어서 經濟理論 自體의 限界性까지 擡頭되고 있다. 예컨대 過去에는 經濟理論이 극히 專門化되어 公害나 人口 그밖에 經濟的인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은 外生으로 取扱되었으나 이들 外生變數의 重要도가 漸增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經濟模型의 內生變數로 다루어야 할 必要性이 切實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sup>(1)</sup> 이렇게 볼 때 이번 「심포지움」에서 現代經濟理論의 開發途上國適用問題를 吟味함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본다.

이 問題에 대한 結論的인 對答으로 筆者는 最近에 있었던 美國經濟學會의 한 「세미나」에서 發表된 「시카고」大學의 「게리·벡커」(Gary S. Becker)教授의 論文가운데 한 句를 引用하고 싶다. 그는 「經濟理論은 오늘에도 適合한 것이고 同時에 西紀 2천년에도 역시 有用한 것이다」(Economic theory is relevant today and the year 2,000.)<sup>(2)</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經濟理論이 經濟發展過程에서 우리가 利用하는 知識의 體系라고 보는 筆者의 見解와 같은 內容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經濟理論이 高度로 專門化된 計量經濟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다.<sup>(3)</sup>

그러나 筆者는 또한 經濟理論을 開發途上國에 適用하는데 있어서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見解에도 意見を 같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經濟理論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適用可能性을 開發途上國의 一般的인 立場에서 살펴 본 다음 지난 10餘年間的 우리나라의 經驗을 上臺로 그 成果와 問題點을 檢討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經驗에 대한 論議는 學界의 共通된 見解가 아니라 筆者 個人의 分析에 立脚할 것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 II. 現代經濟理論과 開發途上國

그러던 現代經濟理論의 對開發途上國 適用可能性에 대한 批判은 어떤 것들인가? 이들 批判은 주로 (1)現實性(realism)에 관한 것, (2)適合性(relevancy)에 관한 것, 그리고 (3)其他의 副作用에 관한 것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學者에 따라 이들 問題에 대한 強調

(1) Kosobud, Richard F. & William D. O'Neill, "A Growth Model with Population Endogeneous," *AER*, Vol. LXIV, May 1974, p.29.

(2) Becker, Gary S. "On the Relevance of the New Economics of the Family," *AER*, Vol. LXIV, May 1974, p.317.

(3) Worswick, G.D.N., "Is Progress in Economic Science Possible?" *The Economic Journal*, March 1972, pp.73-74.

도가 크게 다르다. 反面 이들의 共通點은 現代經濟理論의 對開發途上國適用問題를 自由貿易과 自由放任政策의 對開發途上國適用問題와 크게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現代經濟理論을 批判할 때는 自由放任主義에 立脚한 正統的인 古典學派理論과 新古典學派理論이 主對象이며 現代의 「케인즈」經濟學과 「포스트 케인즈」經濟學(post-keynesian economics)은 主攻擊對象이 아니고 오히려 經濟發展을 위한 赤字財政 및 金融政策이나 總量的인 巨視經濟計劃의 理論的 基礎로 흔히 利用하기도 한다. 그러나 經濟開發計劃이란 것도 그 理論的 背景은 역시 正統的인 新古典學派理論의 延長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論議展開에 있어 現代經濟理論을 現代의 經濟發展論까지 包含한 廣義의 概念으로 解釋하기로 한다. (4) 이제 이들 批判論者들의 主張을 차례로 檢討해 보기로 하자.

### 1. 現實性的 問題

經濟理論의 對開發途上國適用을 批判하는 이들은 흔히 西歐의 經濟理論은 이미 持續的인 成長을 이룩하고 經濟成長 以外的 問題들, 예컨대 資源의 最適配分, 完全雇傭의 維持, 그리고 長期的인 景氣沈滯의 豫防 등이 主要關心事인 先進諸國의 要求에 充足되도록 定立된 것이기 때문에 持續的인 成長에로의 跳躍이나 아니면 跳躍(take-off)의 加速化가 큰 問題인 開發途上國과는 關係가 없거나 실사 있다하더라도 大體로 不適合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5)

그러나 理論이란 極히 抽象化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現實로부터 誘導된 것일 必要는 없다. 또 어떤 理論이 先進國의 經濟現象은 說明할 수 있고 開發途上國의 經濟現象은 說明할 수 없다는 것 역시 無理가 있다고 보겠다. 一例로 需要—供給分析은 先進國에서와 마찬가지로 開發途上國에서도 市場에서의 消費者行態와 價格—購買量(販賣量) 關係를 說明해 줄 수 있다.

물론 開發途上國이 處한 經濟, 社會 및 文化的 與件은 先進國의 그것들과 많은 隔差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여러가지 社會的, 歷史的 및 制度的인 差異를 勘案함으로써 經濟理論의 現實性을 提高시키자는 主張에 대해서는 何等の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現代經濟理論이 先進國의 “特殊한” 경우로 부터 一般化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開發途上國에 適用할 경우 現實性이 缺如된다는 論理에는 無理가 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開發途上國에서 經濟理論의 現實性을 特定開發途上國의 경우를

(4) Myint, H., “Economic Theory and Development Policy,” *Economica*, May 1967, p.121.

(5) Myint, H., *op. cit.*, pp.122—125.

지나치게 一般化시키는 傾向에 의해서도 크게 減少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에 여러가지 條件의 差異가 있는 것 못지않게 開發途上國家間에도 人口의 壓力, 經濟規模, 經濟發展의 程度, 經濟制度 및 其他 여러가지 面에서 差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問題에 대한 注意는 소홀한 것 같으며 심지어는 先進國으로부터의 資本導入增大나 혹은 援助增大를 위해 無分別의으로 極히 一般化된 開發模型이나 理論이 援用되었던 事例도 없지 않았다. 예컨대 「惡循環」(vicious circle)理論은 資源에 비한 人口過剩으로 인해 貧困과 停滯가 생긴 것으로 假定하고 있으며, 跳躍理論(take-off theory)의 政治, 社會 및 制度的인 面에서 이미 相當한 程度의 發展이 이룩된 狀態를 假定하고 있고 「빅·푸시理論」(big-push theory)은 앞서의 두 假定과 더불어 國內의 資本財生産部門을 充分히 維持해 줄 수 있는 國內市場이 存在한다고 假定하고 있다. 이들 理論은 특히 1950年代에 크게 流行했던 것들로서 모두 어떤 特定國家에게만 充足될 수 있는 前提條件을 包含하고 있는 理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開發途上國을 다 說明하고자 한 弱點이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理論이 開發途上國 一般에 適用될 경우 現實性이 缺如될 것임은 當然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筆者가 보기에는 開發途上國에서 論議되고 있는 經濟理論의 現實性缺如是 理論自體의 現實性이 缺如된데 基因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理論模型에 대한 選擇의 過誤에 基因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 面에서 볼 때 經濟發展論을 專攻하는 學者나 經濟計劃樹立家의 責任도 있으며 보다 깊은 經濟思想的 省察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2. 適合性的 問題

또 하나의 批判은 주로 資源의 最適配分問題가 主要關心事인 靜態的 新古典派經濟理論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指摘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미 주어진 資源의 最適配分이 目的인 經濟理論은 可用資源의 增大와 技術向上 그리고 動態的인 經濟變化가 主要關心事인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經濟發展의 促進戰略으로는 適合치 않다는 것이다.<sup>(6)</sup>

물론 現在 우리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問題를 充分히 說明해 줄 수 있는 動態理論을 갖고 있지 않다. 또 成長模型을 中心으로 最近 動態經濟理論上에 發展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은 開發途上國에 適合치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또 當初에 開發途上國을 念頭に 두고 開發된 것들이라 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筆者는 靜態的 經濟理論이 開發途上國에

(6) Myint, H., "Economic Theory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LXXIII, Oct. 1965, pp. 479-485.

適合치 않다는 意見에는 同意할 수 없다. 오늘날 大部分의 開發途上國에서 우리는 資源配分問題가 소홀히 생각되고 있는 現象을 종종 發見하게 된다. 資源配分問題와 關聯해서 先進國들은 生産性이 계속 增加되고 있으므로 설사 資源配分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흡수할 經濟的 여유가 있을 수 있으나 開發途上國들은 그 경우 너무 貧困하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없다. 特히 그들의 價格機構는 크게 歪曲되어 있어서 農業部門에 비해서 製造業 및 公共部門에서의 賃金은 매우 높은 反面 利率은 매우 낮고 換率은 過大評價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相對的으로 農業部門의 交易條件惡化를 가져와 農產物增產 意慾을 減退시킴으로써 農產物生産增加率의 鈍化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製造業部門의 賃金率이 높기 때문에 農村으로부터 多數의 農民이 都市로 流入되나 輸入代替産業을 包含한 大部分의 製造業이 高度의 資本集約的 産業이기 때문에 단지 極히 一部分만이 吸收될 뿐이다. 이것은 都市의 失業問題를 惡化시킬 뿐만 아니라 住宅 및 福祉에 대한 政府投資를 增加시키게 된다. 한편 利率이 人爲的으로 低水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稀少한 資本의 供給마저 展示效果를 노리는 政府의 投資事業이나 民間企業에 浪費的으로 使用되는 傾向이 있다. 더구나 換率의 過大評價와 資本財에 有利한 方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輸入統制政策은 高價의 資本集約的 機械類輸入權獲得이 곧 企業의 致富手段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이들 몇 가지 例는 開發途上國에서 資源配分의 最適化를 통해서 資源의 浪費를 減少시킬 수 있는 경우를 밀해주고 있다. 이것은 곧 傳統的인 經濟理論이 一定한 資源賦存量下에서의 效率의 資源配分을 다루고 있다해서 많은 開發途上國의 關心事인 援助政策이나 經濟開發政策에 重要치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保有하고 있는 資源을 效率的으로 利用할 수 없는 國家는 援助에 의한 資源增加를 效率的으로 管理 내지는 使用할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最近 잘 쓰이는 「吸收能力」(absorptive capacity)에 대한 한 尺度로서 우리는 그 나라의 資源配分能力을 볼 수도 있다. 같은 論理가 貿易理論에도 適用될 수 있다. 어떤 나라가 國內政策의 過誤로 이미 賦與된 貿易의 機會를 效率的으로 利用하지 못하고 있다면 國際經濟協力이나 通商增大로 새로운 貿易機會가 생겼다 하더라도 큰 利益을 보리라고 期待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正統的인 經濟理論은 經濟開發을 推進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그 重要性이 減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重要性을 갖고 있다고 보겠다.

이와 關聯해서 指摘되어야 할 점은 우리가 흔히 開發計劃의 “政策”과 그 基本이 되는 “理論”을 明確히 區別치 못하는 愚를 犯하고 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政策과 理論을

混同하고 있는 수가 종종 發見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開發計劃이란 傳統的인 資源配分理論의 한 應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특히 1950年代에 있었던 開發計劃과 傳統理論의 破壞를 同一視한 傾向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이 經濟發展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막상 經濟發展을 가장 效率的으로 이룩할 수 있는 方法論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效率的인 方法으로는 傳統的인 最適理論이 基本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事實을 우리는 요즈음 基本的인 經濟計劃論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經濟計劃樹立者의 첫번째 課題는 計劃의 所要資源量이 可用總資源量을 超過하지 않음을 確實히 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巨視水準에서의 可能性檢證(test of feasibility)이고 두번째 課題가 微視的인 面에서의 一貫性檢證(test of consistency), 그리고 마지막 課題가 그 計劃의 最適性與否를 決定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傳統的인 經濟理論은 資源의 最適配分을 市場機構를 통해서 遂行하려는 것이고 反面에 經濟計劃은 그것을 政府機構를 통해서 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이들 兩者間에 根本的인 理論的 差異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兩者는 共히 資源의 最適配分을 그 理論的 規範으로 삼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規範을 達成하는 實際的 手段上의 差異만을 보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經濟理論의 適合性 問題를 檢討해 보았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急速한 經濟發展이 目標인 開發途上國에 가장 適合한 理論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資源의 最適配分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 傳統的인 經濟理論이 갖는 有用性이나 重要性은 결코 過少評價할 수 없음을 보았다. 특히 資源의 最適配分問題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事例가 흔히 發見되는 開發途上國의 경우 傳統的인 理論의 重要性은 어느 面에서는 先進國보다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겠다.

### 3. 副作用의 問題

現代經濟理論에 대한 세번째의 批判은 一定한 賦存資本量下에서의 資源의 最適配分問題에 관한 正統的인 新古典學派理論에 대한 것이다.

正統的인 經濟理論은 自由放任主義와 自由貿易主義에 立脚한 것이기 때문에 自然히 財政・金融政策 역시 保守的인므로 開發途上國의 急速한 經濟發展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一般的으로 不利한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開發途上國의 急速한 經濟發展은 大規模의 經濟計劃, 全般的인 保護政策 및 輸入統制와 外資의 制約이 있는 경우에는 膨脹的인 財政 및 金融政策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經濟開發政

策의 援用을 위해서는 大部分의 既存經濟理論, 특히 正統的인 新古典學派理論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正統的인 經濟理論의 重要性은 經濟計劃을 遂行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서 더 強調되어야 함을 보았고 또 그들이 樹立한 經濟計劃의 基本理論이 결국 正統的 經濟理論에 지나지 않음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經濟理論은 客觀的인 것이며 政策立案者들이 選定한 政策目標를 가장 効率的으로 遂行하는데 使用되는 手段이라는 점이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들은 正統的인 經濟理論을 自由放任主義와 混同하고 開發途上國에서는 自由로운 市場機構가 市場의 不完全性 때문에 最適의 資源配分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이 모두 完全한 市場을 가지지는 못하며 또 問題는 不完全性的의 種類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不完全性的의 程度가 다른데 있는 것이므로 既存理論의 改善으로 우리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問題까지도 說明할 수 있으리라 期待할 수 있다. 더우기 市場機構를 狹義의 資源配分機能에만 局限시켜 資源不足이 最大問題인 開發途上國에는 適用될 수 없다는 論理 역시 無理가 있다고 본다. 一例로 우리는 民間貯蓄이 金融市場의 改善이나 資本家階級の 增大로도 增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물론 오늘날 開發途上國에는 論議의 餘地가 많은 問題들이 적지 않다. 例컨대 所得分配의 不公平과 失業問題, 그리고 흔히 企業에 有利한 것이 國家에도 有益하다는 등, 政治, 社會的인 問題들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模型選擇의 誤謬에 基因된 것도 있겠고 또 模型自體의 缺陷에 基因된 것도 있으며 經濟計劃執行者로 인한 問題도 있다. 예를 들어 經濟開發計劃上 重要한 役割을 하는 政府의 經濟活動은 租稅를 통해서 GNP의 20%程度만을 統制할 뿐이며 GNP의 大部分을 生産하는 民間部門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缺乏으로 混合經濟의 分析을 세울리한 데서 오는 結果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經濟理論이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問題를 說明해 줄 것으로 期待할 수 있다. 그동안에도 均衡成長理論이니 不均衡成長理論이니, 혹은 二重構造論이니 하여 部分的인 進展을 本面도 없지 않았으며 특히 計量經濟學의 發展은 經濟理論의 効率성과 有効성을 提高시키는 우리의 努力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한다.

### III. 經濟開發計劃과 韓國經濟

지금까지 우리는 經濟理論의 對開發途上國適用問題를 開發途上國 一般的인 觀點에서 살펴 보았다. 本論文의 序言에서도 잠깐 言及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나간 10餘年間 經

濟開發計劃을 本格的으로 遂行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므로 이제 本節에서는 一般論을 떠나 우리나라에서의 經濟理論의 適用問題를 經濟開發計劃과 關聯하여 살펴 본 다음 適用上에서 發見된 問題點에 대한 筆者나름의 評價가 試圖될 것이다.

### 1. 經濟理論의 韓國經濟에 대한 適用

우리나라에 있어서 未來指向의인 最初의 經濟計劃은 1958年度에 이르러 當時 復興部에 의해 成案되었다. 同計劃의 主要內容은 年平均 5%의 經濟成長과 失業 및 對外依存度の 減少였다. 이計劃은 勿論 方法論上의 많은 缺點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1950年代 韓國社會의 未來指向의인 思考를 體系的으로 結晶化시킨 最初의 土着的인 努力이었다는데 큰 意義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同計劃은 當時 自由黨의 政治「엘리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後日의 參考資料가 된채 成長에로의 轉機는 逸失되고 말았다. 實質的인 長期經濟開發計劃이 樹立推進된 것은 1961年 5.16혁명 以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技術的으로 完全한 것이라기보다는 政治的인 道具에 不過하다는 批判을 甘受해야만 했다. 1967년부터 시작된 第2次 5個年計劃은 우리나라 經濟에 큰 影響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次5個年計劃은 1次計劃에 비해 技術的으로도 많은 진보가 있었는데 그것은 2次5個年計劃成案時에 USAID, 獨逸 等으로부터 經濟計劃의 諮問을 받았고 國內에서도 全幅的인 參與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벌써 3次5個年計劃의 4次年度에 와 있으며 4次5個年計劃의 樹立段階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開發計劃의 戰略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즉,

(1) 全般的인 經濟成長率, (2) 產業構造와 貿易, (3) 國內貯蓄과 海外貯蓄, 그리고 國內貯蓄의 部門構成問題가 주로 고려되고 있다. 이제 그間 이들 要素에 어떤 變化가 있었는데 살펴보면 우선 國民總生產은 計劃이 시작되기 以前인 1954—62年間 年平均 實質成長率이 4.0%이었는데 반해 1962—73年期間중에는 年平均 10.1%의 實質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GNP의 產業別 構成比를 보면 1次產業의 構成比는 減少된 반면 製造業部門의 構成比가 크게 增加되고 있다. 1954年度에 製造業部門의 GNP構成比는 6.8%에 不過했는데 1962年度에는 11.6%, 그리고 1973年度에는 28.4%로 크게 增加되었다. GNP成長에 힘입어 1人當 GNP도 1970年 不變「달러」로 1954年度에는 131「달러」이던 것이 1962年度에는 151「달러」로 되고 1973年度에는 346「달러」로 計劃初年度에 비해 2倍以上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貿易面에서도 刮目할만한 變化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商品輸出을 보면 1962年度에는 불과 5천5백만「달러」였으나 1973年度에는 32억 2천5백만「달러」로 同期間에 年平

均 44.8%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輸出의 對 GNP構成比도 1962年度에는 1.5%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3年度에는 24.7%로 增加되었다. 마지막으로 國內貯蓄率과 海外貯蓄率을 보면 1962年度에는 名名 1.6%와 10.8%였으나 1973年度에는 21.0%와 4.9%로서 國內貯蓄率은 크게 提高된 反面 海外貯蓄은 크게 下落되었다.

筆者는 이러한 量的인 面에서의 變化를 果然 成功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問題에 대한 論議는 여기서 避하고 싶다. 否定的인 見解를 갖는 人們은 이러한 急速한 變化의 要因을 過去에 우리나라의 貯蓄이나 輸出水準이 너무 낮았고 相對的으로 海外援助依存度가 너무 높았다는 점을 들 수도 있고 또 豊富한 勞動力과 熟練된 勞働者들의 낮은 賃金水準을 들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制度的으로도 有利했던 점을 指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指摘되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急速한 變化가 輸出, 貯蓄, 그리고 投資增大를 위해 一聯의 積極的인 政策手段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例컨대 1964年度에는 換率現實化가 취해졌고, 1965年度에는 金利現實化, 1966年度에는 租稅 및 豫算制度的 改革이 뒤따랐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民間投資와 民間資本導入의 效率性 및 迅速性을 提高시키고 製造業部門의 輸出增大와 金利機能의 回復을 통한 民間貯蓄增大를 통해 經濟成長의 隘路를 克服하고자 努力했고 이와 같은 努力은 어느 程度의 結實을 보았던 것이다. 특히 初期에 취해진 一聯의 現實化措置는 우리나라의 經濟開發過程에서 市場機構의 機能이 큰 役割을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또한 一聯의 主要經濟政策決定過程에 經濟學者의 參與가 있었던 것이 事實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經濟開發過程에서도 經濟理論의 役割이 컸음을 是認해야만 할 것이다.

## 2. 適用上에 나타난 問題點과 評價

II節에서 우리는 이미 經濟理論의 本質에 對하여 定義를 내린 바 있고 또 經濟理論의 對開發途上國適用上의 批判을 檢討하면서 一般的인 論議를 한 바 있다. 이제 經濟理論이 韓國이라는 特定國家에 適用될 때 생기는 問題點을 檢討할 차례다.

우리나라에서는 經濟理論의 現實性이라든가 혹은 適合性에 대해서는 別異論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세번째 問題인 副作用에 관해서는 특히 最近 많은 論議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우선 指摘되어야 할 점은 이들 論議의 大部分이 開發途上國 一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經濟理論을 皮相的으로 理解하고 있는데서 緣由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經濟理論을 經濟計劃政策과 混同하는 데서 오는 批判이 不少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좀더 明確히 理解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를 分明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다.

첫째 政策立案者들로부터 緣由된 副作用을 들 수 있다. 經濟學者들은 基本的으로 一般의인 現象에 대한 類型을 찾는 理論指向的이므로 모든 現象을 抽象化시키고 單純化시키므로써 共通의인 傾向을 追求하며 例外的인 경우는 捨象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인 듯하다. 그러나 政治家내지 行政家들은 特定狀況下에서의 具體的인 問題에 直面하는 것이 普通이므로 그들이 直面한 具體的 問題에 대한 解答을 찾고 그 解答의 一般的 與否에는 關心이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事情을 보면 經濟學者의 現實參與가 곧 理論의 現實參與와 같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官吏들 역시 初期에는 經濟理論을 받아들이고 利用하는데 誠意를 보였으나 近來에는 經濟理論의 現實性을 過少評價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價値批判의 結果인 具體的 政策手段의 合理化에 利用하려는 傾向이 發見되기도 했다.

둘째로 經濟理論이 全般的으로 信任을 받지 못하고 充分히 援用되지 못한 結果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經濟發展過程에서 經濟理論은 꾸준히 參與해온 것이 事實이지만 結局 政策目標라는 高次的인 問題는 官吏에 의해 決定되었다. 다시 말해서 政策目標上의 缺陷까지 經濟理論의 責任으로 轉嫁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附今の 8.3 措置리든가 1.14 措置와 같은 것은 政策的 내지는 政治的 措置임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經濟理論과 同一視하는 危險性은 排除되어야 할 것이며 企業을 中心으로 한 壓力集團의 經濟政策樹立에 대한 영향의 比重 역시 問題가 되고 있다. 그것은 經濟政策과 國民經濟와의 聯關性을 弱화시키기 때문이다.

세째는 模型選擇上의 問題點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經濟計劃에 흔히 援用되는 巨視經濟模型은 經濟問題의 解決方案을 提示하기보다는 解答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模型의 本質이다. 그러므로 先進國에서 先進國經濟를 念頭에 두고 開發된 經濟模型은 우리나라의 實情을 考慮하여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런 段階에 到達하지 못했기 때문에 模型의 現實性이나 適合性이 그만큼 弱化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는 具體的인 經濟政策手段의 效果가 나타나는 時差構造도 잘 研究되어 있지 않으며 家計나 民間企業이 政策變化에 어떻게 反應하는가에 關係 깊은 研究가 缺乏되고 있다. 그러므로 模型을 통한 豫測의 現實性이나 信賴性은 그만큼 減少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指摘되어야 할 점은 經濟計劃에서 利用되는 各種 資料의 制約과 信憑性 問題다. 經濟計劃模型은 一般的으로 計量經濟的 方法에 의한 現實分析이 隨伴된다. 그러므로 資料의 可用性과 信憑性은 絶對的인 重要性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各種 經濟統計의 可用性이 극히 制限되어 있으며 그나마 信憑性에도 많은 問題가 있

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러한 資料에 立脚한 結論이 가져온 結果는 現實과 乖離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IV. 結 言

지금까지 우리는 現代經濟理論을 開發途上國에 適用하는데 있어서 提起되고 있는 몇가지 問題들을 一般的인 觀點에서 考察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經濟理論의 適用과 그 問題點을 評價했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해 보면 첫째로, 開發途上國에 一般的으로 提起되는 問題點의 檢討를 통해서 우리는 (1)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는 理論의 現實性, 適合性, 그리고 副作用에 관한 批判은 大體로 經濟理論 내지는 模型選擇의 過誤에 基因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市場機構의 運用에 대한 보다 現實的인 分析을 통해서 經濟理論의 有用性을 提高시킬 수 있다는 것과, (2)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에는 歷史的, 社會的 및 制度的인 面에서 差異가 存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므로 經濟理論을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에 應用하기 위해서는 開發途上國을 念頭에 두고 開發되지 않은 既存經濟理論의 改善이 要求된다는 점을 指摘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資源의 最適配分을 主眼點으로 하고 있는 正統的 新古典學派理論은 資源制約的인 開發途上國에서의 最適配分에 援用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할 것이고 「해로드-도마」型的 巨視成長模型을 包含하는 케인즈學派的 巨視經濟의 接近方法역시 보다 深化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要望되는 것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過程에 適用되는 長期的인 生産要素供給의 變化와 生産技術變化를 說明할 수 있는 完全한 動態的 接近方法의 開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既存經濟理論이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過程에서 갖는 有用성은 포기될 수 없다. 지금까지 經濟理論이 不當하게 批判되어 왔다면 그것은 아마도 經濟理論을 自由放任의 自由主義經濟學과 同一視하거나 完全한 動態的 接近이 아닌 理論은 無用하다거나 아니던 케인즈革命의 影響이 너무 컸던데 部分的으로는 基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經驗을 통해서 우리는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을 同時에 發見할 수 있었다. 즉 지나간 10여年間의 急速한 經濟變化에서 우리는 經濟理論의 役割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反面에 部門間的 不均衡이러든가 所得分配, 資源配分상의 많은 問題點을 批判者들은 否定的인 面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副作用의 大部分은 經濟理論의 過誤에 基因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模型의 無分別한 援用—韓國의

實情에 대한 充分한 勘案이 없다는 의미에서—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經濟變動에 미치는 諸經濟的 變數들에 대한 充分한 分析과 理解가 不足했다는 점에 基因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經濟理論의 改善이 切實히 要望된다고 하겠다. 더우기 60年代에만 해도 經濟學者와 政策立案者와의 距離는 먼 것이 아니었으나 最近 乖離感이 增加되는 것은 所望스런 現象이 아니라고 보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經濟理論의 現實性과 適合性을 提高시키는 努力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Becker, Gary S., "On the Relevance of the New Economics of the Family," *AER*, Vol. LXIV, May 1974, pp. 317—319.
2. Cole, David C. & Lyman, Princeton N., *Korean Development*, Harvard Univ Press, 1971.
3. Faber, Mike & Sears, Dudley ed, *The Crisis in Planning*, London, Chatto and Windus, 1972
4. Kosobud, Richard F. & William & O'Neill, "A Growth Model with Population Endogeneous," *AER*, Vol. LXIV, May 1974, pp. 27-32.
5. Kurien, C.T., "Keynesian Economic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 XIV, July-September 1966, pp. 50—63.
6. Mathur, Ashok, "On Throwing the Baby Away with the Bath-Water,"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 XII, April-June 1965, pp. 397—416.
7. Myint, H, "Economic Theory and Development Policy," *Economica*, May 1967, pp. 117—30.
8. ——— "Economic Theory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LXXIII, Oct 1965, 477—91.
9. Papanek, Gustav F, *Development Policy—Theory and Practice*, Harvard Univ. Press, 1968.
10. Smith, Vernon L., "Economic Theory and Its Discontent," *AER*, Vol. LXIV, May 1974, pp. 320—323.
11. Worswick, G.D.N., "Is Progress in Economic Science Possible?" *The Economic Journal*, March 1972, pp. 73—86.